

# “분리해 지역특화형 연구 강화” vs “통합해야 상생 발전”

## ‘광주전남연구원’ 분리·통합 놓고 광주·전남서 잇따라 공청회

“지역 싱크탱크인 만큼 자치단체 간 통합보다는 분리해 운영하는 게 조직 발전에 유리합니다”  
 “연구원 분리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는 연구 성과 축소를 가져올 뿐 아니라 광주·전남의 통합적 정책에 대한 기대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통합 후 8년 만에 또 다시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될 운명에 처한 광주전남연구원의 운영 여부를 놓고 광주와 전남에서 잇따라 공청회가 열렸다.  
 16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통합에 따른 패널들의 찬·반 의견으로 팽팽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방안이 거론되면서 광주 전남 각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남도 주도로 마련됐다.  
 김중익 (새상생나무 이사장은 “대도시인 광주와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이뤄진 전남은 지리적, 인구통계학적, 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이 달라 연구 수요도 차이가 난다”면서 “지역특화형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물리적 통합운영 보다는 분리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변수가 많은 다른 자치단체 간 통합 운영보다는 명확하게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분리 운영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도 “하나의 연구원이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진 두 개 자치단체의 정책개발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선명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주·전남 정책연구기관을 분리하지는 주장은 상호 연계와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 중심이 아닌, 행정구역 중심의 소지역주의로 회귀하지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합당한 지 의문”이라고 분리 운영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현재 연구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 현재 조건 하에서 처방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면서 “소규모 조직으로 분리시키자는 것은 그동안 투여된 많은 매몰 비용 및 노력, 현재 산출되고 있는 성과들을 원점으로 되돌려 버리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상 동시대 도시계획과 교수도 “연구원 위상 정립과 역할 부여에 대한 확실한 정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도 광주시와 시의회가 공동 주최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매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면 지도·감독의 일원화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지

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 분리에 찬성하는 쪽은 ‘차별화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웠고, 분리에 반대하는 쪽은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재고할 것을 주장했다. 류재한 전남대 교수는 “상당한 지역 여건과 발전전략에 토대를 둔 차별화된 연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는 광주와 전남의 공동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상생을 이루는 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경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 시도 수장들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운영이라는 방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와 전남은 상생의 협력 게임을 해야 서로 뺏고 뺏기는 치킨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이재태 전남도의원 (더민주·나주 3)은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반대 촉구대회’를 열고 “광주시와 전남도

의 ‘상생발전 1호’로 평가받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시도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며 “통합한지 불과 8년 만에 분리하지는 것은 그간 쌓아올린 전남과 광주의 상생과 협력, 소통과 통합의 가치까지 송두리째 훼손하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가 1995년 광주시 출연을 통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다.  
 2007년에는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으며, 2015년 민선 6기 당시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다시 통합됐다.  
 민선 8기 들어 생활 환경이나 산업구조가 다른 광주와 전남의 정책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시 연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분리 문제가 수면위에 떠올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구 치평마을 자원순환가게에서 열린 16번째 정책소풍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조성’을 주제로 자원순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강기정 시장 “자원순환, 광주 모델 필요”

### 치평마을 자원순환가게에서 16번째 ‘정책소풍’

강기정 광주시장이 취임 이후 16번째 정책 소풍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주제로 택했다.  
 강 시장은 지난 15일 광주 서구 치평마을 자원순환가게에서 자원순환 활동가들과 정책소풍을 열었다. 이 자리는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1회용품 감량, 재활용 가능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등 자원순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평 자원순환가게’는 광주시가 자원순환 시민실천사업의 하나로 지원한

5개 자원순환마을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원순환의 핵심은 시민 참여고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교육이 필수”라며 “광주만의 자원순환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들은 “자원순환 활동가에게 자긍심을 주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수당 등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립 ▲자

원순환 활동가 육성 ▲자원순환가게 등 거점 확대 ▲상가·단독주택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참석자들은 또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하기 위해 소각장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시민 인식개선과 친환경적이고 각종 편의 시설을 포함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기회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의 중요성, 공동의 이익과 시민행복을 위한 시민 참여수당과 같은 인센티브 확대, 광주만의 모델 확립 등 의견에 공감한다”며 “행정, 활동가, 시민, 기업 등 의견을 모아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순환 정책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5개 자치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 동·광산구 ‘신규도시’, 서·남·북구 ‘계속 지원’...광역단체 유일

광주시 5개 자치구가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가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광역단체 중 모든 자치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서구와 남구, 북구가 올해는 계속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동구와 광산구는 올해 처음 선정되면서 5개 자치구 모두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3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장애인의 역량 개발 지원과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단계 심사를 통해 63개 기초지자체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국교육과장은 “장애인과의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 시민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어촌 빈집 강제 수용·소득 향상 대책 시급”

### 청년어업인 간담회...수산업·정주여건 개선 등 의견 수렴

“마을마다 빈집이 넘쳐나지만, 소유주들의 재산 증식 욕심, 무관심 등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5년간 비어있는 주택은 강제수용해 귀어귀촌인들에게 임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셨으면 합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가족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정주여건이 너무 차이가 나요.”  
 “청년어업인들이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증을 서 저리 용자를 해줬으면 합니다. 생산만 해서는 소득을 더 높일 수가 없어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14일 목포 한국섬진흥원에서 신안·진도 등 전남의 청년어업인 4명과 함께 ‘청년의 눈으로 본 수산업·어촌’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KMI는 전남을 포함해 전국 각 권역의 청년어업인들을 만나 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박상우 KMI 어촌어항부장이 이끌고, 귀어 13년차로 신안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는 남관우(42)씨, 3대째 진도에서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 한승진(30)씨, 귀어 4년차로 신안에서 김 양식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우(29)씨, 신안 압해도에서 가리비 양식과 맨손어업을 하고 있는 귀어 15년차 강민구(38)씨 등이 참여했다.  
 한씨는 “어촌으로의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청년들만을 위한 면허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서는 어촌이 충분한 정주여건(교육, 문화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이방인  
이 기원 소하

문이당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